

金融實名制와 企業 財務政策의 方向

—大企業의 側面—

具 石 護*

I. 머릿말

70년대 중반부터 시도되기 시작한 金融實名制가 금번 文民政府의 경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되는 금융실명제는 일단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소의 유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實名化의 대상에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기존의 非實名資金에 대한 세금 추정과 고액 인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 등 전면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같은 강력한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이탈에 따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그간 비공개적으로 관리 운용되어 왔던 자금 및 거래관행이 일시에 투명화됨으로써 기업경영에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통하여 經濟正義를 실현하고 衡平性을 제고하며 건전한 商去來를 확립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금융실명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면 오히려 기업의 체질과 효율성이 현재보다도 더욱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과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한편, 금융실명제하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經濟秩序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 나름대로 경영을 대폭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측면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른 기업의 政策方向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韓國經濟研究院 副院長

II. 金融實名制와 企業의 政策方向

1. 實名制와 企業經營

우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기업의 경영행태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앞으로 대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공정한 競爭原理에 따라 기업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주도형의 성장전략을 택해온 만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과 指導가 일반화되어 왔다. 이와같이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실명제하에서 기업은 정부의 특혜에 의한 성장보다는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성장이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경영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정책시행에 의한 地代追求(rent seeking)보다는 경영효율성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경영활동의 透明化와 公開化가 요구된다.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앞으로 기업의 자금흐름이 공개됨에 따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투명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방식도 법제도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공개화, 투명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경영의 國際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원칙을 준수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의 틀과 기준을 선진국의 기업수준에 맞추는 경영의 국제화와 企業再組織(restructuring)이 요구된다.

2. 實名制와 企業金融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金融市場 環境이 크게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기업이 자금조달 및 운용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資本費用(capital cost)을 고려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영의 국제화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企業外形보다는 收益性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성적인 적자기업은 경제적으로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의 존속을 막을만한 경제적

제재장치가 부족하다. 그것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금융의 낙후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중요한 투자결정에 있어서 자본비용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특히 대기업은 국제화(globalization)차원에서 자금조달시 國際金融市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신용도가 있는 대기업이 최근과 같은 低金利 추세의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高金利의 국내금융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기업이 금융비용면에서 막대한 機會費用을 지불하는 셈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국내금융시장에서 벗어나 자금조달의 국제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업의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3. 實名制와 企業環境의 改善

금융실명제하에서 기업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정부의 環境造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실명제의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기업환경의 개선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은행을 단순한 民營化 차원을 넘어서 기업화하여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은행의 경영을 상당부분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인이 존재하는 은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지워지고 있는 사회적 부담, 즉 경제력 집중완화를 목적으로 한 재벌기업의 與信規制를 비롯한 대기업差別化의 정책을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의 여신결정은 금융원리에 입각하여 은행 나름대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에 대한 物量規制를 철폐해야 한다. 시장금리안정, 株價안정을 목적으로 설정된 현재와 같은 회사채 발행 및 기업 유상증자에 대한 정부개입은 정부의 기업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채발행과 무상증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돈의 흐름을 가격과 물량의 양면에서 자유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을 차별화하는 조치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의 開放化 國際化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93년중 실시한다는 계획에 있다. 이때 금융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물량의 흐름도 완전히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즉, 금융흐름을 국제금융시장과 연결시키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가 金利自由化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개방의 시기를 96년 이후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계획보다 조기

추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넷째, 정부의 行政서어비스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방된 국제화(globalization)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행정서어비스와 정책기능도 민간부문과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국제화된 多國籍 大企業은 생산기지나 R&D거점을 선정함에 있어 정부규제, 행정서어비스, 그리고 조세, 금융, 과학기술, 산업입지 등을 포함한 정책 기능들을 고려하고 있다. 경쟁력과 기술력이 높은 세계적인 우수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이러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국내의 행정서어비스, 규제수준, 정책기능 등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III. 結 言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정착여부는 일차적으로 경제내의 각 주체가 제도의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거래를 완전 투명화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지만, 그외에도 이 제도의 시행하에서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적응하여 나갈 것인가하는 면도 주요한 成敗要因이 된다. 大企業의 입장에서 앞으로 금융실명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화된 경영활동과 더불어 競爭原理에 입각한 기업성장과 기업의 국제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企業金融面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시장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 나가며, 조달된 자금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연결하는 체제도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순조로히 정착, 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여건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自律化 開放化 國際化가 시급하며 정부의 행정서어비스에 대한 質的 改善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통화관리나 자본 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이를 경제 현실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